제3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무토우 마사토시(武藤正敏)
소속: 일본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주제: 한국에서 보는 한일관계의 시각, 일본사람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일시: 2006년 04월 11일 (12 : 00 - 14 : 00)

*강연내용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해 설명하면, 70년대 일본에 두 가지 쇼크가 있었는데, 닉슨 쇼크와 오일쇼크가 그것이다. 이러한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적자 증가와 국제금융지수의 붕괴를 막고자 하였다. 국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플라자 합의이지만, 이 합의 이후 나타난 엔고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Japan as Number 1』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일본경제는 호경기를 맞이하여, 1980년에 자동차 생산 세계 2위, 84년에 일본인 중에 거의 90%가 스스로를 중류계급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았다. 그 당시 흔히 들었던 말 중에 일본은 미국에서 배울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은 정부개발원조에서 수량 총액 1위를 하는 등, 경제 발전, 세계 공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바로 걸프 전쟁이었다. 당시 일본은 걸프 전쟁에 130억 달러를 냈으나, 세계의 평가는 Too Late, Too Little였다.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원조결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은 PKO에 참가해야 한다고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1992년에 PKO협력법을 만들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의 피크는 1989년 말로, 그 당시 일본주식의 닛케이 평균이 3만 9000엔 정도였는데, 그것이 90년이 되자마자 떨어졌다. 모범 택시 타던 사람이 일반택시, 택시 타던 사람이 JR을 타게 되었고 JR에서 화물운송을 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연말 선물의 수는 줄지 않았지만 금액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TV광고가 줄어들고 있었다. 당시 수치 상으로 일본경제는 매우 좋은 상황이었지만, 실제 경기는 89년부터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이 쭉 있었다. 그 이후에 주식은 결국 1만엔 밑까지 떨어졌고, 버블의 붕괴는 나타났다. 이러한 버블은 일본인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더 이상 『Japan as Number 1』이나 미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는 불경기는 주기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대책도 그 금리를 낮춰주는 것,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 그런 대책만 했지만,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토지신화는 사라지고, 버블의 영향으로 임금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의식은 고이즈미 수상 이후에 나

타났다. 그 동안 빚이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정부지출의 증가로 재정악화가 생겼다. 어떤 정책으로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감도 사라져갔다. 하시모토 수상의 시기에는 조금 나아지는 기미도 보였지만, 그때 소비세를 올리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줄어 오히려 불경기가 왔다. 그 기간이 바로 잃어버린 10년, 사실은 잃어버린 15년, 이다. 고이즈미 수상 이후, 개혁의 길을 시작하고 경제성장은 많이 놓아졌지만, 성장률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것이 80년대, 90년대까지의 일본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은 어떤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출생률과 늘어나는 노인인구 문제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인구가 줄어들면 부담이 높아지는데 일본에서 의료비가 연간 12조엔(약 100조원), 그 중 노인의료비가 40% 정도이다. 2025년에는 의료비는 69조엔(600조원), 그때는 노인의료비가 약 50%가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민 부담률, 세금과 사회보장비(의료비와 연금 등)를 합치면, 98년에는 44%였지만, 재정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한 50% 정도로, 미국은 35%, 영국 40%, 독일과 프랑스 50%, 스웨덴이 70% 정도이다. 일본도 2025년 정도면 재정적자를 포함해 약 70% 정도가 되고, 재정적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50%가 넘는다. 이것은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으로, 일본은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1억 2천 5백만이지만, 2100년 일본인구는 6천 5백 만명, 1000년 후엔 130명이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이들이 일본의 번영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재분배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불경기에는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과 중앙 정부의 부채 총액은 775조엔, 일본 GDP의 150% 정도로, 국채만해도 541조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에, 그리고 정부의 일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도 많이 하고 있고, 1엔 기업이라고 해서 자본금이 1엔만 있어도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의 완화 등 경쟁을 늘이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 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제 등도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시기이다. ‘프리타’ 라고 하는 청년 실업 상태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은 이와 같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것도 2020년 정도까지 일 것으로, 그때쯤엔 이미 중국의 경제규모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규규모가 적어져 대국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 다민족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국가를 위해 무언가 하는 그런 풍조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대국주의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 일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 국제상황에서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결국 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력해서 아시아에서 지도국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협력이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와 가장 사회

구조가 비슷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나라, 그리고 공통의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 나라, 한국이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음악을 듣는 한국학생들 중에 80% 정도는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반면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나 안좋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협력 이상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이런 상태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우경화 문제인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무라야마 담화, 작년 고이즈미 수상이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말한 내용 등을 들으면 식민지배와 침략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지 않겠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다.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은 전후 60년간 적에 대해 발포하거나 적을 사살한 일이 없다. 우리가 총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때뿐이다. 전후에 일본은 일관된 평화주의를 유지해왔고, 미래에도 자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2005-2009년의 5년간 신중기 방위계획 총액은 24조 2천 4백억 엔인데 이것은 전에 비해 3.3%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앞으로도 방위력 증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어렵다. 일본은 일국평화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제한해 왔고 자위대는 전수방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그것은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위성개발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방위를 위한 것이지 공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전에 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총리의 야스쿠니 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답하면, 총리는 제 2차 대전에 일본사람도 3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의 의미에서 야스쿠니를 간다고 하고 있다. 상호의 인식이 다른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A급 전범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교과서에 대해서도 정부는 역사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다만 사실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교과서 검정제도이다. 결코 편견을 가진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현재의 한국을 잘 알고 있고, 한국사람을 좋아하고, 한국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역사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한국과 미래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현재의 한국을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개정을 하고 평화주의를 버리는 것인가에 대해 말하자면, 자민당의 헌법개정안도 나왔지만 평화주의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 등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지금 헌법과 별다른 차이는 없고, 다만 개정 후에는 자

위대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위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인정을 하면서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은 평화주의의 방치 보다는 전후 60년의 총결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60년간 한번도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는데, 그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우리가 새로 규정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설명의 필요가 있다. 환경 보전을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은 평화주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후 60년간 일본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어떤 일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FTA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한국 측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 FTA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큰 시장이 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제3국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한국의 소재산업은 발달이 늦어서, 일본의 물건을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의 소재산업의 규모는 95년의 400억 달러에서 2002년의 1200억 달러로 늘었고, 2005년에는 2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한국은 소재산업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일본과 협력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에게도 많은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